

내수 반등...“내년 한국경제 2.1% 성장 전망”

금융연구원 세미나...민간소비도 1.6% 증가 예상

글로벌 교역 위축·美 관세 정책에 수출 0.8% 둔화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1%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6%로 높아지지만,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0.8% 수준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예측했다.

우선 연구원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2.1%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완화적 금융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고부가가치 반도체 설비 등을 중심으로 완

히 증가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배포된 소비쿠폰과 내년 예정된 소비부양책에 힘입어 상반기까지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내년 중 소득 여건의 구조적인 개선이 불투명하고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딜 것으로 예상돼 소비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크게 위축된 건설투자 증가율은 내년 2.6%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하락하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완만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0.8%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적 교역 증가세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원인으로 꼽혔다.

총수입 증가율 역시 4.0%에서 1.1%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1115억 달러에서 내년 1070억 달러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교육 둔화와 유가 하락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기 움직임, 지정학적 위험 동향,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경로 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올해 2.5% 내년 2.4%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상황 등 금융안정 중시 기조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구원은 내년 고용률이 6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약 15만명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수 회복 흐름의 지속,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 등이 고용 시장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내년 수출 증가율 0%대 전망...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여파

한경협 조사 0.9% 증가 예측...중국발 공급과잉 등 영향

美 관세 대응 수출단가 조정 최다...자동차 최대 피해 우려

내년 국내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주력 업종을 survey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선박’ (5.0%), ‘전기전자’ (3.1%) 등 6개 업종의 내년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자동차’ (-3.5%), ‘철강’ (-2.3%) 등 4개 업종은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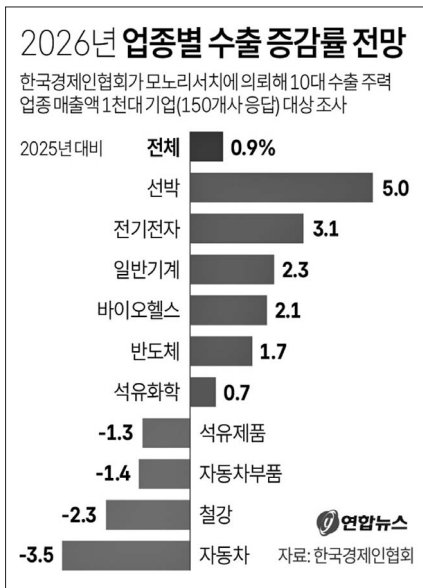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 (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그 외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8.6%),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 (8.6%), ‘미·중 무역갈등 심화’ (8.6%)도 수출 감소 전망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대부분 (95.3%)은 내년 수출 채산성주이 올해와 비슷 (77.3%) 하거나 악화 (18.0%) 될 것으로 봤다. 내년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답한 기업은 4.7%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10개 조사대상 업종 중 8개 업종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 응답 비중보다 높게 조사됐다. 선박은 모든 기업이 올해와 비슷한 것이라 응답했으며, 전기전자는 채산성이 ‘개선’ 될 것이라 응답한 비중과 ‘악화’ 될 것이라 고 응답한 비중이 동일했다.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 (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11.1%), ‘미·중 무역 갈등 등’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 (11.1%) 등이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평균 1375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1월 2일~11월 5일 기준)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4원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적정환율에 비해 39원 높았다.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53.3%)을 꼽았다. 이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 (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 (16.7%) 등 순이다.

올해 4월 미국의 관세 인상 후 수출 기업들의 매출액 (-1.1%)과 영업이익 (-1.3%)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부과로 손해를 입은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은 총 8개로, 자동차 (-9.5%, -8.5%), 철강 (-3.4%, -4.0%), 석유화학 (-1.5%, -0.7%) 순이다.

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수출단가 조정’ (28.0%),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비용 흡수’ (25.8%),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16.5%)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제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계지연 및 외환 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예식장·스드메 가격·환불기준 표시해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오늘부터 시행

예식장과 웨딩업체는 서비스와 품목에 대한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와 필라테스 등도 요금체제와 중도해지 환불 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를 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가 스튜디오·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에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는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광양·무안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

LH 공공임대 공실 활용...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양·무안 만원주택’ 입주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해 접수받겠다고 11일 밝혔다.

‘만원주택’은 전남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확보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기관협력형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본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20평형) 10호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

혼부부로,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일에 전입 가능한 자여야 한다. 또한 도내 근로활동 등 경제활동 요건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타 시·도에서 전입 예정인 청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각 1호씩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입주자는 자격요건 검증 거쳐 공개추첨으로 선정되며, 일정은 11월 말 접수, 12월 자격 검증, 2026년 1월 입주자 추첨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농기원, 청년창농타운 입주기업 지원

전남 예비 창농기업 10개사 선발...21일까지 모집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이 농업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청년창농타운 입주회원’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전남에 주소를 둔 예비 창농기업 및 창농 관련 법인·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청년창농타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입주기업은 2026년 1월부터 청년창농타운에 입주하며, 기본 입주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

주자는 독립 사무공간, 농업업 창업교육 및 행사, 식품 가공장비 이용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농타운은 청년농업인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비즈니스센터 (성장지원)’와 ‘제품지원센터 (시제품 연구·개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창농타운에서는 기초 창업교육, 심화 성장캠프, 네트워킹, 투자 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역 스타트업 통합 IR 캠프 11일 전남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벤처투자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5년 광주·전남·제주 스타트업 통합 IR 캠프’를 개최했다.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프는 수도권 투자사와의 만남을 통해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악성 임대인 정보, 보증3사 공유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3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 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 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보증3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경우 개인 동의가 필요해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입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개하고 있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는 보증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

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기가 발생할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이후 후속 조치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